

민주, 김병기에 자진 탈당 요구 “애당의 길 고민을”

“정청래, 민심·당심 토대로 고민 중”

윤리심판원 징계 앞 제명 염두 압박

최고위원 보선후 ‘1인1표’ 당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가 애당심의 발로라는 것을 김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본인이 그도록 소중히 여겨온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젠 지도부를 향해 제명 요구 움직임까지 암울해있다”며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신속한 윤리심판원 심판 결정에 맡긴다는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결 입장을 유지하고 윤리심판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속속 의원들의 김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요구 입장 표명도 자체를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입국하는 김경 서울시의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현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인천국

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정 대표와 공유된 것이라는 질문에 “공유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길 요청한다는 말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가능성’에 김 의원의 탈당 등이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12일로 예정된 윤리심판원

징계 절차와 김 의원에 대한 당내의 비상 징계 요구 목소리 등을 언급한 뒤 “그런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는 말씀”이라며 “다만 제명이나 탈당 등 이런 문제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연합뉴스

민주, 15일 본회의에 2차특검 상정 방침

與 새해 1호 법안 종합특검 추진

국힘 ‘지방선거용 내란몰이’ 반발

여야 다시 強 대 强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과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의 동시 처리를 예고하면서 여야가 다시 강대 강대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에 강하게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지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도.

여기에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신천지 의혹까지 통일교 특검에 포함한 것을 ‘물타기’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2차 특검과 달리 통일교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 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11일

나온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연말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친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함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는 지난 7일 두 특검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일께 안건조정위 표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에 필요한 법사위 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법과 함께 비행점 민생 법안 처리도 추진 할 계획이다.

우선 처리 대상에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본회의 일정을 다소 순

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에 전면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대 특검에 이은 종합특검은 ‘내란 몰이’를 지방선거 국면 까지 이어가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도 전재수 의원 등 여당의 금품수수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5일부터 필리버스터 대결에 다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민주당은 범여권 의석수를 토대로 2차 종합특검부터 법안을 차례로 하나씩 표결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다시 구사할 전망이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의 경우 법안 추진 필요성에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수사 대상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조율이 이뤄지면 15일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기보다 처리 시점에 다소 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공직자, 친족 수의계약시 공개 의무화

권향엽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1일 “공직자가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중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포함) ▲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본인 및 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특수 관계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직자가 자신의 형제·자매, 사촌 형제·자매 등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인척과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되며 불가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한 대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진수기자

“민간 무인기 사실이면 중대범죄”

李대통령 “軍警 신속·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군경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면서 민간 무인기 가능성을 두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